

동아시아의 발전과 변동: 회고적 재평가*

신윤환**

- I. 문제제기: 동아시아의 위기와 '성장담론'의 해체
- II. '동아시아 담론': 성장, 안정, 국민통합의 신화와 이론
- III. 동아시아의 정치경제: 성장과 모순
- IV. 동아시아의 정치: 안정과 갈등
- V. 결어: 동아시아 담론의 극복을 향하여

이 논문은 1990년대 동아시아의 장기불황이나 통화위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 지속적인 정치적 안정 속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국민적 통합을 추구했던 근대화 노력에 대하여 어떠한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 위기 이전의 동아시아의 근대화를 연구, 분석, 처방한 시각, 이론, 정책 등이 경제적 '성장', 정치적 '안정', 사회문화적 '통합' 담론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고 이들을 회고적으로 재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우선 경제위기 이전에 생산된 동아시아에 관한 대다수 연구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실체를 과장하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오도했다고 지적한다. 그 시대의 연구자들은 동아시아도 언젠가 경제 위기와 불황,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혼란, 반대파의 도전과 저항에 당면하게 될 것이 라는 평범한 역사적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동아시아의 근대화는 각종 모순을 배태한 경제성장, 복잡한 갈등의 표출을 억압한 정치적 안정, 다양한 소수의 정체성을 무시한 국민통합의

* 이 논문은 2002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과학분야(지역연구) 연구비 지원(과제번호: KRF 072-BL2058)으로 이루어졌음.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무질서한 혼합물이었다. 필자는 이 논문의 본문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성장, 안정, 통합을 지향한 연구들과 이론들을 1990년대 이후 곧 맞이하게 되는 위기, 혼란, 저항으로 점철된 동아시아의 현실과 경험에 비춰 보면서 그 시각의 편향성, 논리적 모순, 증거의 빈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주제어 경제성장, 정치변동, 사회문화적 통합, 동아시아

1. 문제제기: 동아시아의 위기와 '성장담론'의 해체

동아시아 성장의 '신화'가 깨어지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과 1997년 태국으로부터 비화된 통화위기는 동아시아의 성장, 안정, 국민통합의 신화가 허구는 아닐지라도 심각한 모순과 갈등을 내포한 것이었으며, 그것에 관한 분석과 이론들이 완전한 날조는 아닐지라도 복잡한 이해관계와 편향적인 교의를 은폐한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 동아시아의 성장의 음지에는 모순이, 안정의 이면에는 갈등이, 국민통합의 허울 속에는 분열이, 그 싹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동아시아의 성장 신화는 일본의 장기불황, 1997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을 강타한 금융위기, 이로 인한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기 침체, 중국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이호랑이론”과 “중국붕괴론” 등 비판적 전망에 의해 크게 힘을 잃었다(Becker 2001; Chang 2001). 1980년대 중반부터 동아시아로 확산된 민주화의 물결은 동아시아 정치에서 ‘지상명령’으로 여겨졌던 정치적 안정의 높은 장벽을 무너뜨렸다. 권위주의와 정치적 안정, 권위주의와 경제적 성장 간의 당위론적 고리는 경험측과 실천에 의해 끊어지고, 민주주의도 안정과 성장을 생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불

리일으키고 있다. 민족형성과 성장의 시기에 국민과 국가에게 부여되었던 ‘신성성’(sacredness)은 다양한 문화적, 지역적, 사회적 소수의 도전에 의해 그 가면이 벗겨지고 있다. 국가, 중앙, 엘리트에 의한 강압적 표준화와 동화는 가치상대주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자발적인 통합이라는 대안적 사고의 도전과 저항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성장의 시대에서 생산되었던 각종 이론적 분석과 학술적 연구성과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50여 년 전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후 복구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과 타이완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20세기 안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성취하리라고 예측한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이 선호한 나라는 이집트, 파키스탄, 인디아 등이었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끝난다”고 한 칼 맑스(Karl Marx)의 정언은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Marx 1963, 1). 성장이라는 희극으로 막을 내리는가 했던 동아시아 경제는 위기와 불황이라는 비극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사회과학자들의 실수는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도 일본의 불황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될 줄을, 동아시아의 위기가 그렇게 갑자기 발발할 줄을, 예측한 자는 거의 없었다. 통화위기가 시작되기 불과 몇 달 전인 1997년 9월까지 세계은행조차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을 예찬하며 그 지속을 점치고 있었다(World Bank 1997). 그렇게 굳건했던 일본의 “55년 체제”나 무소불위의 수하르토(Suharto) 독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예상한 학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불황과 위기를 경험한 이후, 어떻게 성장의 시기를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하였다. 필자는 경제위기 이전에 생산된 동아시아에 관한 대다수 연구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실체를 과장하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오도했다고 평가하고 ‘성장시대’의 담론과 이론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그 시대의 분석가들은 동아시아도 언젠가 경제 위기와 불황, 정

치적 대립과 사회적 혼란, 반대파의 도전과 저항에 당면하게 될 것이라는 평범한 역사적 법칙을 왜 받아 들이지 않았을까? 돌이켜 보건대, 각종 모순을 배제한 경제성장, 복잡한 갈등의 표출을 억압한 정치적 안정, 다양한 소수의 정체성을 무시한 국민통합이 바로 성장시대의 참모습이었던 것이다.

이 연구는 동북아와 동남아로 구성된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적 단위로 취급하고, 동아시아 각 국가들이 경험한 근대화 경로를 유사한 것으로 상정한다. 다시말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히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시대를 경험하였고, 이 성장은 1990년대에 들어 불황이나 위기와 같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국가간에 나타나는 주된 변이는 성장과 위기를 경험한 시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는다.

II. '동아시아 담론': 성장, 안정, 국민통합의 신화와 이론

20세기 전반의 세계정치 무대가 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른 유럽에 의해 장악되었다면, 그 후반은 군사패권과 경제성장에서 우위를 차지한 미국과 동아시아에 의해 주도되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 군사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향후 형성된 양극적 냉전체제 하에서 한 축을 형성하였고, 20세기 마지막 10여 년 동안 소련이 해체되고 현실사회주의 체제들이 몰락하면서 단일 패권국가로 떠올랐다. 20세기 후반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본은 2차대전의 '파괴'를 '창조'를 위한 계기로 승화시켜 1980년대가 되면 미국을 넘볼 수 있는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하였다. 일본에 이어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속적이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이 폐쇄적인 통제경제를 청산하고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동참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그 막을 올렸다.

〈표 1〉 성장시대 동아시아의 근대화 경로

정치 경제	민주주의적 안정	권위주의적 안정	불안정
성장	일본(1955~73) 한국(1987~현재)* 태국(1993~현재)* 필리핀(1946~72) 필리핀(1994~현재)*	한국(1961~87) 싱가포르(1965~2000)* 타이완(1949~현재) 인도네시아(1966~97) 말레이시아(1965~현재)* 중국(1978~현재) 베트남(1986~현재) 라오스(1987~현재)	태국(1946~1992)
지체	일본(1991~현재) 필리핀(1986~93)	필리핀(1972~85) 중국(1945~78) 베트남(1975~86)	인도네시아(1998~현재) 미얀마(1945~1992) 캄보디아

주의: * 는 1997, 1998년 제외.

필자는 20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정치, 사회문화의 영역에서 설정한 최우선 과제를 ‘경제적 성장’, ‘정치적 안정’, ‘국민 통합’으로 정리한다. 그 과제 달성을 향한 출발점, 과제간의 우선 순위, 목표의 성취도는 나라에 따라 달랐지만,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민국가 건설을 향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매진은 한결같았다. 물론 전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이 세 가지를 주요한 국가과제로 설정하였지만, 이 모두를 동시에 달성한 지역은 동아시아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난 후 30년 만에 아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부국이자 기술강국으로 입지를 굳혔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이 아시아의 “신흥공업국”(NICs: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으로 부상하는 데 성공하였다. 1970년대 중반 동남아시아의 이념적 경계가 확정되자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자본주의권 동남아국가들도 성장 주도의 경제정책을 전개하여 1990년대가 되면 “후발 신흥공업국”(Late NICs)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는 국내 노선대립의 해소, 미국과 관계

개선, 냉전 체제의 이완과 종식으로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의 대열에 합류하였고, 1990년대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두 국가로 떠 오르게 된다. 1997년 금융위기가 닥치기까지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듯 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고도성장”(rapid, sustained growth; World Bank 1993)은 장기간의 정치적 안정이란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성취되었다. 자민당의 일당지배로 구축된 이른바 “55년 체제”는 1993년까지 무려 40년 가까이 존속하였고, 싱가포르, 대만, 한국은 30여년의 성장기간 동안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행하였으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신흥공업국들도 1970년대 이후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구가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소모적인 이념투쟁과 오랜 전쟁을 끝내고 국민단합의 분위기 속에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였다. 잦은 군사정변에 시달린 태국, 마르코스 치하에서 ‘개발 없는 독재’만 경험한 필리핀, 외세 개입과 내전으로 전국토가 “킬링 필드”(Killing Fields)로 변모한 캄보디아, 자력갱생의 기치 아래 폐쇄체제를 유지하여 경제적 고립과 정체를 자초한 버마(미얀마)가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이룩하는 데 실패하였지만, 이 나라들 또한 개발도상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근대화의 위기”이거나 “정치쇠퇴”로 치부되었다(Huntington 1968).

성장과 안정의 시대는 동아시아인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여 강력한 국민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시간이기도 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나뉠대로의 민족 및 국가 관념을 가지고 있던 동북아시아도 새로운 세계질서, 시대적 상황, 국내정치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외치며 군사대국을 건설하려던 일본은 2차 대전에 패전한 이후 민주, 평화, 번영을 지향하는 새로운 국민, 국가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전쟁과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립자족하는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에서는 탈식민화(decolonization) 직후 신식민주의

를 타파하고 외세를 배격하여 진정한 주권을 확립하려는 민족주의와 토착인의 주체성 제고와 복지 향상을 배타적으로 도모하려는 “토착주의”(indigenism)의 정서와 구호가 수그러들면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소수민족과 종족을 통합하여 새로운 민족과 국민을 형성하려는 운동과 정책이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변화에 맞춰 동아시아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과학적 이론, 실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그리고 이 흐름과 변화에 편승하고 그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대적 담론이 제시되거나 등장하였다. 세계 “제일”(Number One) 일본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은 “일본시스템”, “발전지향적 국가”, “일본식 경영” 등에 의한 결과로 개념화, 모형화되고(Vogel 1979; Johnson 1983), 그것을 구성하는 성공요인들은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미국에 의해서까지 모방되었다. 일본에 이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기적적” 성공은 “동아시아 발전모델”—용어뿐이든 실질적인 모델이든—을 만들어 내었고(World Bank 1993), 이것은 “아시아적 민주주의”와 “아시아적 가치” 담론과 짝을 이뤄 근대화를 향한 서구적 경로에 대항하는 독자적이고 대안적인 경로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Lee 1994). 동아시아적 발전 경로를 둘러싸고 자유주의자와 구조주의자, 시장주의자와 국가주의자들간에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양측 모두가 동아시아의 성공이 자기 쪽의 이론이나 발전전략의 우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실이다.

동남아의 후발 주자들은 “동아시아를 바라보며”(look-east; Mahathir 전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을 일컬음) 일본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였다. 동아시아형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가 주도하는 동아시아식 “수출주도형 산업화”(export-led industrialization)를 이식하려는 노력이 잇따랐다. 심지어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구상에 일조한 1940년대의 “기르기 떼”(flying geese) 모형까지 동원

되어 일본-동북아-동남아로 잇는 계서적 국제분업체제와 산업이전경로로서 제시되기도 했다(문정인 2002, 52). 마지막으로 중국이 1990년대를 통하여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1세기에는 중국중심적 세계질서가 500년 만에 재현할 것이라는 “중국지배론”, “중국위협론”이 고개를 들고, 세계사에 대한 인식을 “동양을 중심으로 다시 돌려놓는”(ReOrient; Frank 1998)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맑스-레닌주의적 수사, 자본주의적 원리, 전통적 규범을 모두 동원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중국적 사회주의”(中國特色的社會主義)를 확립하고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를 건설한다며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독창적인 용어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선 동아시아 국가들이 제시한 성장 이데올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江澤民 2002). 특히 중국 내 일부 개혁론자가 제안한 “신권위주의”와 “신보수주의”는 ‘안정속의 성장’이라는 동아시아 성장 담론의 중국판이라고 볼 수 있다(오가타 2003).

III. 동아시아의 정치경제: 성장과 모순

1.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20세기 후반의 동아시아는 성장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 국가들이 높은 경제성장을 상당기간 지속하였다. 동아시아의 발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이른바 “동아시아의 기적”을 이룬 지속적 고도성장을 기록한 나라들이다. 여기에는 일본을 필두로 하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이 포함된다. 신흥공업국에는 “네 마리 작은 용”(Four Little Dragons)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동아시아 NICs와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중심이 된 동남아 NICs를 여기

〈표 2〉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지표

	1965~80 연평균 경제성장률	1980~90 연평균 경제성장률	1990~2001 연평균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2001 미달러	구매력지수 2001 미달러
한국	9.9	9.7	5.7	9,400	18,110
중국	6.8	9.5	10.0	890	4,260
일본	6.4	4.1	1.3	35,990	27,430
홍콩	8.6	7.1	3.9	25,920	26,050
싱가포르	10.0	6.4	7.8	24,740	24,910
태국	7.3	7.6	3.8	1,970	6,550
말레이시아	7.4	5.2	6.5	3,640	8,340
필리핀	5.7	0.9	3.3	1,050	4,360
인도네시아	7.0	5.5	3.8	680	2,940
베트남	-	-	7.6	410	2,130
라오스	-	-	6.4	310	1,610
캄보디아	-	-	4.8	270	1520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2*; *World Development Report 2003*.

에 포함시킬 수 있다. 통화위기 이전에는 인도네시아도 이들과 함께 분류되기도 했다. 둘째로, 사회주의로부터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미하거나 시장경제로 이행 중인 국가들로서, 초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 유형은 중국과 베트남으로 대표되고 라오스도 이를 따르고자 하고 있다. 셋째는 성장과 지체, 지체와 성장 사이를 진동하거나, 성과 자체가 위 두 유형에 포함시키기가 미흡한 나라들이다. 한때 오랫동안 성장했다가 하루아침에 허물어진 인도네시아, 성장과 지체 사이를 반복하고 있는 필리핀, 평화정착 이후 경제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캄보디아, 오랜 폐쇄체제를 종식하고 개방정책을 추진하지만 국내의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미얀마가 여기에 해당하지만,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일관성 있게 추구한 다른 동아시아국가들과는 사회구조나 국가능력에 있어서 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일찍이 명치유신에 의해 선진국가의 반열에 들어선 바 있던 일본은 정부의 강력한 후원 하에 2차 대전 패전 이후 전자제품, 기계, 선박, 철강 등의 전략상품을 주요 수출품으로 한 대외지향적 수출주도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한다. 일본은 1950년부터 1973년까지 연 평균 8%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70년대

일본경제는 중반 이후 오일쇼크로 잠시 불황을 맞았던 1986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자랑하는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일본이 선도한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은 이른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출현으로 확산되었다(Vogel 1991). 이 후발산업화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와 차관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일본처럼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을 대량생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홍콩을 제외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성장은 모두 일본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한 국가 개입과 억압적인 노동통제로 특징지어 진다. 이들 국가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하여 연평균 10%을 오르내리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980년대가 되면 중진국의 반열에 들어선다.

동북아 국가에 비해 동남아 국가들의 성과는 평가가 다소 엇갈린다. 미얀마나 라오스와 같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최빈국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나라도 있고, 성장의 시대를 놓쳐 버린 필리핀이나 30년에 걸친 성장의 결과를 심각한 경제위기로 불과 몇 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려 버린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들에 비해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모범적 성장 사례에 해당하고, 베트남은 아직 저소득국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1980년대 말부터 연평균 10%이상의 비약적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행보는 동아시아 경제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더욱 제고하였다. 중국은 꾸준한 개혁과 점진적인 개방을 통하여 시장경제적 요소를 확대하고 자본주의 세계경제와의 연계성을 높여 왔다. 대내적으로는 인민공사 해체, 단위체제의 역할 감소, 자영업과 민간 기업 허용, 국유기업의 점차적 민영화, 향진기업과 외자기업의 농촌 유치, 호구제도의 완화 등을 통하여 자본, 상품, 노동의 흐름을 점차적으

로 시장에 의존시켰다. 광동성과 복건성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대외 경제개방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세계최대 규모의 외국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2001년 현재 중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제6위 수준에 이르렀고, 2010년에는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을 겨냥하고 있다.

2. '성장담론' 과 비판이론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은 엄청난 주목과 관심을 끌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많은 신생국이 탄생하였지만, 동아시아만큼 여러 나라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지역은 일찍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1960~70년대의 고도성장을 뒤로 한 채 1980년대 이후 거듭되는 외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성공은 곧 공산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로 치부되었다. 일본은 발 빠른 재건과 복구로 미국의 총아가 되었고, 아시아에서 든든한 우방으로 떠올랐다.

우선 일본과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찬양하는 갖가지 미사여구가 전 세계로부터 쏟아졌다. 정치인들과 언론은 물론이고, 학자들까지 나서 일방적인 찬사를 퍼부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룬 성공은 “기적”이며, 일본은 “세계 제일” 국가가 되었다(Vogel 1979; World Bank 1993). 심지어 일본의 발전정책은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이 따라야 할 하나의 “모델”이자 “모범”으로 인정받았다(Johnson 1983). 나아가 동아시아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를 구성하는 갖가지 요소들이 경제적 성공의 요인으로 언급되면서, 잡다하기까지 한 다양한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제발전에 관한 기존의 주요 이론들도 동아시아 분석에 예외 없이 동원되었다. 서로 충돌하는 학파와 이론가들이 모두 동아시아 성공사례야말로 자신들의 시각과 분석이 맞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Wade 1990; Balassa 1991). 시장의 위대한 승리라고 외

친 자유주의자,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 구조주의자와 국가주의자, 토지개혁과 사회경제적 평등이 성공의 열쇠였다고 주장하는 수정주의자, 유교적 규범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문화주의자까지 실로 다양하기 짝이 없다. 이들이 강조하는 항목은 이른바 “동아시아 발전모델”로 집약된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이념형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특정 국가가 택한 발전전략과 경제정책을 이념형으로나 모범적 유형으로 삼을 수도 없고, 특정 학자 개인의 분석을 채택하는 것은 너무나 입장이 상이한 학자들이 동아시아 현상을 분석하고 있기에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1965년부터 1990년 사이에 높은 성과를 보인 8개국의 동아시아 경제(HPAEs: High-Performing Asian Economies)를 분석한 세계은행의 1993년의 연구보고서는 기존 논의들을 총정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World Bank 1993). 이 보고서는 지나치게 많은 요인들을 열거하고 있어 체계적인 재구성이 쉽지는 않지만, 대충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균형성장(growth with equity)을 추구함으로써 정부가 사회적 지지와 정통성을 확보했고, 둘째, 경제적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로 구성된 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며, 셋째,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정통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견지하였고, 넷째, 환율, 관세 정책을 포함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다섯째, 인적 자원 개발과 노동력을 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하였고, 여섯째, 저축률과 투자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요컨대, 정부가 선택적으로 여러 시장에 개입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창출함으로써, 저축을 증대하고 투자를 증진시키며 노동력의 질을 높이고 수출을 촉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불과 4년 뒤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을 8개국의 HPAEs에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과정이나 정부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나 취약성을 전혀 지적하거나 경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성장과 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좌파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종속론과 종속적 발전론이 대표적인 비판 이론에 속한다 (Evans 1979). 반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민중주의(populist) 경제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 부었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을 위시한 자유주의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광범한 경제개입에 대해서는 이를 무시하거나 시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개입에 지나지 않는다고 수용하는 관용을 베풀었다. 한편 구조주의자와 국가개입론자들은 동아시아의 성공은 바로 국가의 주도과 개입 덕분이라고 반색하며, 동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제3세계에서 거둔 실망스러운 성과를 이 지역에서 만회하고자 하였다.

종속론적 입장은 동아시아의 성공을 주변부와 중심부 경제와의 연계가 약화된 지역과 시점에서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 나타날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지속된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으로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그 보다 더 융통성 있는 해석을 가한 에반스의 “종속적 발전론”이나 까르도쥬(Fernado Henrique Cardoso)의 “신종속론”(new dependency)에 의하면, (반)주변부에서의 자본주의적 성장은 중심부 산업자본이 이윤추구를 위한 전략의 다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며, 이는 주변부 국가가 다국적 자본과 국내 자본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가능해진다(Evans 1979; Cardoso and Faletto 1979). 이 수정주의 종속론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종속적 발전이 낳은 여러 가지 모순과 파행성을 적절히 지적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인기를 상실한 종속론 탓에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종속적 발전론은 그 모순과 파행성을 수정과 점진적 개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지 않았고, 오로지 종속적 관계의 청산, 즉 사회주의의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처방을 내림으로써 추종자를 잃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종속이론의 물결은 동아시아

로 건너오면서 그 기운이 쇠하고 말았다. 요컨대, 성장의 지속과 성장 담론의 품미 속에 비판 이론은 신통한 반응을 얻지 못했다.

3. 회고적 재평가

기존의 성장 이론들은 불황의 지속과 위기의 도래를 사전에 예측하지도 처방하지도 못했다. 돌이켜보면, 그 이론들이 예측력을 갖기엔 허점이 지나치게 많았고, 성장의 담론이 너무나 지배적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비판적 이론들은 이념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성장 담론과 이론은 비판적 관점이 결여된 지나친 낙관론에 젖어 있었고, 경제적 측면에만 치우친 모형이었으며, 시대착오적으로 일국적 수준에 분석단위를 맞춤으로써 지역적, 전지구적 충격과 대응을 고려하지 않았다.

첫째, 비판적 관점의 결여는 동아시아 성장 이론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었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동아시아의 성장은 제3세계와 자본주의적 발전의 모범 사례로서 예찬이 쏟아졌고, 이러한 분위기는 이론적 분석에도 영향을 미쳐 비판적 분석을 방해하였다. 나아가 비판의 수위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고정되어, 주요한 거시경제적 기본지표(fundamentals)에 악화되는 경우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1997년 금융위기를 맞기 전, 세 나라 중 어느 한 나라도 이 지표상 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주류 경제학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듯 편협한 경제학적 입장은 자본과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도 그릇된 판단을 이끌었다. 자유주의자들에게 자본이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이것의 자유로운 이동은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한다고 본다. 경제위기의 주요한 요인이었던 단기성 투기자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자본 '성선설'을 견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둘째, 동아시아 성장 이론들은 경제적 측면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정치적 측면을 경시한다. 앞서 세계은행의 연구에도 보았듯이 성공요인

으로 꼽고 있는 것들은 경제적인 것들이다. 그것도 올바른 경제정책이 나 발전전략의 선택을 요체로 삼고 있다. 이른바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정부기업간의 유기적 협력을 중시하지만, 그것이 정경유착, 부정부패, 투명성 약화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합리적 선택이 정실자본주의나 부패의 척결보다 더 성장에 유리하다는 판단은 잘 입증되지 않는다. 동아시아 성장모델은 또한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핵심적 전략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억압적 노동통제를 유발한다. 노동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는 인권 탄압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의 재생산과 정치적 안정을 해쳐 결국은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동아시아 발전모델이 소득간 격차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은 균형성장을 이루었다고 찬사를 보내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최상류층에 재산과 소득을 집중시키는 재분배효과도 있었다. 이러한 비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당한 주목과 면밀한 분석을 동아시아 성장 이론들은 결여하고 있었다.

셋째로, 동아시아 성장 이론은 한 국가라는 경제체제에 수준을 맞춘 폐쇄적 분석틀이라는 취약성을 드러낸다. 자본의 유입, 자유무역, 기술이전 등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과 교환을 중요한 성장 요인으로 들고 있지만, 외부적 요인에 대한 통제와 대응을 고려에 넣지 않는다. 동아시아 성장 이론에 있어서 국제적 측면은 외생변수나 환경으로 ‘주어진 것’(given)일 뿐이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지역협력이나 국제레짐과 연계된 모델이었다면 국가경제의 경계를 넘어 확산된 통화위기에 좀 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성장 이론은 지역적, 전지구적 수준을 분석단위로 하여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IV. 동아시아의 정치: 안정과 갈등

1. 동아시아의 정치체제 및 정치변동

동아시아의 성장은 정치적 안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성장시대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지한 정치적 안정은 대체로 권위주의 체제에 의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체제는 최근 20년 동안 큰 변동을 겪었다. 그 경로는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민주주의를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한 유일한 나라로서 일본이 걸어 온 경로이다. 일본 정치의 두드러진 특징은 일개 특정 정당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집권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55년 체제”는 1955년부터 1993년까지 무려 38년간 지속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자민당은 줄곧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장악하여 집권정당의 지위를 고수하였으며, 그간의 일본의 정치변동은 자민당 내 파벌간의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으로 설명된다(장달중 2003).

둘째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권위주의 통치 하에 놓여 있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한국, 태국과 같이 군부 쿠데타로부터 출발하거나 군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권위주의 체제도 있고, 타이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같이 민간인 독재를 유지한 권위주의도 있지만, 대체로 개인적 카리스마, 억압기구, 성과에 의한 정당화 등을 통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한 개인 지도자에 의한 권위주의 통치로 특징지어진다. 평화정착 이후 캄보디아도 수상 훈센에 의해 이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

이 권위주의 체제들은 다시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우선 그 체제가 이룩한 업적과 성과에 의해,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이 성장에 성공한 권위주의와 필리핀이나 미얀마와 같이 실패한 권위주의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 체제 이후 변동 양태에 의해, 필리핀, 한국, 태국, 타이완, 인도네시아와 같이 민주주

〈표 3〉 동아시아의 정치체제와 정치변동

성장시대 90년대 이후	민주주의	권위주의	후기전체주의
공고화된 민주주의	일본	한국, 타이완, 태국, 필리핀, 몽골	
미공고화 민주주의		인도네시아	
권위주의	필리핀 (마르코스)	브루나이,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후기전체주의			중국, 베트남, 라오스

의로 이행한 정치체제가 있는가 하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와 같이 이행을 권위주의가 지속되는 체제도 있다.¹⁾ 민주주의 이행을 완결한 체제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여부나 정도에 따라 다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유형은 중국, 베트남, 라오스와 같은 탈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주는 정치의 유형이다. 이 유형은 비교정치학자들이 “후기전체주의 체제”(post-totalitarian regime; Linz 2000)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동아시아의 후기전체주의는 여러 수준에서 상당한 정도의 선거기제를 도입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들로부터 정치발전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기는 하지만, 동아시아의 탈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는 동원적 전체주의체제는 물론이고 동유럽의 후기전체주의과도 큰 차이를 드러낸다.

동아시아의 정치는 그 체제유형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기 동안 대체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체제는 커다란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민당 일당의 우위에 의한 “55년 체제”가 붕괴되고, 정당연합

1)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반민주주의”semi-democracy로 마르코스 하의 필리핀, 수하르토 하의 인도네시아, 네윈 하의 버마, 지금의 캄보디아를 “사이비민주주의”(pseudo-democracy)로 명명하는 이도 있다. Case(2002, 1-28)를 참조.

에 의한 정부구성이 반복되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동아시아 권위주의체제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하게 되는데, 필리핀, 한국, 타이완, 태국이 이행을 나름대로 완결 짓고 “공고화된 민주주의”(consolidated democracy)의 확립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동티모르와 같이 권위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불안정한 민주주의 체제도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처럼 권위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거나 명백한 권위주의 체제가 있지만, 이 체제들도 민주화 요인이 성숙해 있거나 강력한 민주화 요구에 직면해 있어 민주주의는 그리 먼 미래가 아닌 듯이 보인다.

2. ‘안정담론’ 과 비판이론

성장시대의 동아시아에서 정치체제와 변동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담론은 “국가안보” 내지 “정치안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과제 내지 목표의 하나라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정치안정은 엄연히 다른 정치적 가치이지만,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흔히 권위주의체제의 안정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대활동조차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간주하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입장을 통틀어 ‘안정’ 담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안정담론은 지배계급과 통치집단의 전체적인 이익과 공통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안보나 안정을 단순히 중시한 정도를 넘어 거의 절대적 가치를 지닌 ‘최고선’이나 ‘지상명령’으로 간주하는 극단적인 우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한다.

정치적 안정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거나, 다른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내지 조건으로서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민주체제의 경우와 정권의 경제적 성과가 정당성과 연결되는 정치문화를 가진 권위주의 체제의 경우, 정치적 안정은 경제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여겨진다. 2차 대전 패전 후의 일본은 경제 복구와 발전이 최우선 과제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안정 되어야 한다는 심리가 대중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경제발전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던 신흥공업국에서는 민주화 세력, 사회적 소수, 정치적 반대자를 “정치적 안정만이 경제성장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개발독재”의 성장 논리를 들어 눌렀다(O’Donnell 1973; Feith 1979). 이런 나라들에서는 반공산주의 안보나 국내정치의 안정만큼이나 경제 발전을 중시하였다. 어떤 때에는 지나치게 빠른 경제성장이 사회적 모순이나 갈등을 야기하여 정치적 안정을 해칠 정도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의 통치엘리트들이 정치적 안정을 다른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그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는지 항상 구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안정은 최우선 국정 과제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자본주의적 발전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구사회주의국가들이나 사회주의적 전통이 남아 있는 나라들은, 만약 지나치게 빠른 경제성장이 정치적 안정을 해칠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제성장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펴기도 한다. 중국, 미얀마, 인도네시아가 여기에 해당하는 듯이 보이며, 베트남의 경우는 공산당 정권이 높은 정통성을 향유하고 있어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정치적 안정에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

동아시아의 안정 담론은 여러 부류의 사회, 정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 이론들 중 가장 널리 수용된 것은 수정주의 근대화론의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제3세계의 근대화 과정은 여러 가지 위기나 정치적 퇴행에 당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거나 강력한 권위를 가진 정부가 필요하다. 헌팅턴이 그 필요성을 역설한 “정치제도화”(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도 정치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Huntington 1968). 수정주의 근대화론이 명시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처방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비판자들에 의해 “개발독재”를 비호한 것으로 해석되어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입장은 동아시아에서 여러 지역, 국가, 사회경제 부문을 분석한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였다.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 “아시아적 가치”론과 이 가치에 입각한 “아시아식 민주주의”론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Diamond and Plattner 1998에 실린 여러 논문들을 볼 것). 아시아식 민주주의론은 동아시아 각국에서 명칭만 달리지만 구체적인 주장으로 나타났다. 개혁 이후의 중국에서 서구식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신권위주의”와 “신보수주의”가 옹호되고,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서구적 인권 관념”에서 유래한 내정간섭으로 치부되며, 정치적 민주화나 사회적 평등은 물질적 진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의 문제라는 “선부(先富)론”이 주장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독특한 천황제를 포함하는 상징적 안정 기제나 2차 대전의 패배를 딛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민 모두 경제발전에 전념하며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정치문화 덕분이라는 입장이 가장 강하였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서는 앞선 헌팅턴의 정치발전 이론과 오도넬이 1960~70년대 남아메리카의 정치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내세운 “관료적 권위주의론”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논리가 등장하였다(O’Donnell 1973). 또한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에는 “값싼 양질의” 노동력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필요한 경우 강압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권위주의적 노동통제 덕분이었다는 것이다(Deyo 1987). 이 나라들의 노동정치는 “국가 조합주의”(state corporatism)로 분석되기도 하는데, 이 이익대표체계는 국가의 개입과 강제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민주화 이전의 동남아 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지금까지 등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은 “관료정체론”(bureaucratic polity)이라고 볼 수 있다. 태국 정치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등장했던 이 분석틀은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 심지어는 필리핀에 적용되기도 했는데, 동남아 정치는 기본적으로 관료에 의해 장악되며, 관료제 밖에는 정치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Girling 1981). 이 외에도 많은 동남아전공 정치학자들은 “억압적 발전주의 체제”(repressive-developmental regime; Feith), “국가를 위한 국가”(state-qua-state; Anderson),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 Crouch), “수비대국가”(garrison state; Kingsbury) 등 다양한 개념들을 구축함으로써 동남아 국가들에서 사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이론화하고자 하였다. 이 모든 이론과 개념들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지도자나 통치 집단의 전략이나 정치적 안정에 우호적인 사회체제, 전통적 규범, 특유한 정치문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안정 담론과 이론은 경제적 성장 담론이나 이론에 비해 훨씬 강력한 반대와 비판에 직면하였으나,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성장의 시대 동안 경쟁적인 패러다임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비판 이론은 자유주의와 급진주의 양 입장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서구화된 지식인 계층에 제한되어 있었으며, 급진주의는 더욱 제한된 추종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탓에, 비판 이론은 민주화 이전에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자유주의는 권위주의의 인권 탄압과 침해를 비판하는 보편적 인권론과 독재정치의 종식을 외치는 자유민주주의자로 구성된다. 이들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급진주의적 이론은 권위주의 체제의 매판적이거나 파시즘적인 성격을 고발하며, 이 정권이 자본가들의 착취와 지배를 영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자유주의 이론은 성장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또한 시민사회가 성숙해 감에 따라 더욱 많은 추종자들을 확보하게 되나, 동아시아의 민주화에 끼친 이론으로서의 영향력은 최소한에 머물러 있었다.

모든 동아시아 국가에서 안정 담론에 대한 이론적 비판은 항상 존재하였다. 민주화 운동으로 유명한 한국이나 필리핀은 물론이고, 지금도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매우 강한 미얀마, 중국, 베트남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세력이나 이론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미안마에서는 민중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서방 국가들이 원조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던 아웅산쑤찌를 추종, 지지하는 광범한 학생, 지식인 계층이 존재하며, 중국에서는 반미 성향의 민족주의 세력이나 급속한 자본주의화에 반대하는 “신좌파”와 이론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필리핀은 급진주의적 입장이 한때 큰 힘을 얻었던 곳이다. 이 입장에는 계급평등을 부르짖는 맑스주의와 반제, 반식민을 강조한 종속론이 모두 포함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론들이 권위주의 독재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강력한 반대파를 만들어 내는 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화 이후에 그 힘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비판이론에는 안정 담론 자체가 반민주적 발상의 소산이라는 민주주의 이론 외에도 안정과 성장간의 규범적, 논리적, 경험적 연결고리를 부정하는 여러 입장들이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 정치적 안정이 권위주의 체제에 의한 것인 경우 그것을 빌미로 민주주의가 희생될 수 없으며, 안정과 성장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체제유형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둘러싸고 팽팽한 논쟁이 있었다. 경험적인 분석들은 그 관계의 유무에 대해 일방적인 판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권위주의적 통제가 오히려 역기능적이라 가설이 설득력을 얻었다. 또한 권위주의 체제는 내재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 성장을 이룩한 체제일수록 “성공의 실패”에 당면하게 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안정 이론은 성장 이론에 비해 훨씬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고 하겠다.

3. 회고적 재평가

안정 담론과 이론은 성장 담론과 이론에 비해 더 큰 약점들에 노출

되어 있었다. 안정 담론은 지배적 담론의 위상을 점차적으로 잃어 갔을 뿐 아니라, 정치적 위기와 혼란을 막지 못하였으며, 그것이 약속한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치적 안정을 추구한 동아시아 권위주의 정권들의 전략은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 왔다. 즉 안정의 담론적 지위는 계속 흔들려 왔다. 권위주의 체제는 태생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 평등을 거부하는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은 계속 모순을 생산하여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특히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예측한 수정주의적 발전론의 약점도 드러났다. 대다수의 권위주의 체제는 정치적 승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민주주의 반대파의 등장을 제도화를 통해 수용하기는커녕 배제와 탄압으로 다스렸던 것이다.

나아가 안정 이론들은 정치적 변동과 발전이 어떠한 힘에 의해 추동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정치발전론이 예측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해 형성된 중간계층만이 변동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년간 눈부신 발전을 한 민주화 이론에 의하면, 민주주의 이행은 이행 이전의 체제유형, 정치엘리트의 민주화 전략, 특히 민주적 신념의 확산이나 국제적 압력 및 추세와 같은 외부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안정 담론과 이론은 이러한 요인들을 오히려 억누름으로써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반동적 역할을 담당한 측면도 있다.

지속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안정 이론들의 정책적 함의도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동아시아 대다수 국가에서 안정 속에 추진되었던 경제성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적인 불황으로 연결되거나 위기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했다. 일본의 불황과 위기 이후 자유주의자들이나 구조주의자들이 공히 지적하였듯이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정경유착, 부정부패, 투명성의 결여 등에 취약하였고, 이것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정치적 기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안정 담론에 앗겼던 것이다. 또한 급진주의적 비판자들이 적절히 비

판하였듯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 추구한 근대화는 일종의 “종속적 발전”으로서 각종 “경제적 모순”, “사회적 탈구”, “정치적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Evans 1979). 실제도 이들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사회적 합의가 깨어지며, 정치적 안정에 도전하는 반대세력이 생겨났다.

일본의 55년 체제는 기업-관료-정치인으로 구성된 강력한 분배연합을 형성하여 일본경제가 불황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정치개혁과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있다(Pempel 1998). 개혁 후 중국의 후기전체주의는 중국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소득불균형, 농촌문제, 도시빈곤, 부정부패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제3세계의 성장 경험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Becker 2001). 반면 민주화 이전 안정 시대에 축적한 갖가지 모순과 탈구는 많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들어 놓았다.

V. 동아시아의 사회와 문화: 통합과 저항

1. 동아시아 사회적, 문화적 변동

20세기 후반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민족과 국민 정체성을 모색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일체감을 갖도록 노력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탈식민화에 의해 신생국으로 출발했던 동남아 국가들은 복잡하게 구성된 다양한 종족을 하나의 민족과 국민으로 묶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었고, 오랜 역사를 가진 동북아 국가들은 각각 다르게 다가온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민을 창출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국민정체성의 확립, 사회통합의 실현, 일체감의 형성이라는 과제는 냉전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되던 국제질서 속에 던져진 신생국들에게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난제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중앙에 대항한 지역주의, 대안적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반대에 부딪쳐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안정의 시대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 과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풀어 나갔다.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국가는 20세기 이전에 이미 민족과 흡사한 집단적 정체성 내지 일종의 동류의식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형적(prototype) 민족 정체성은 2차 대전 직전까지 외세의 침략, 독립운동, 내전 등을 거치면서 근대적 의미의 민족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2차대전의 종전 이후 동북아 3국은 공히 국가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국가들은 민족 또는 국민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낼 필요에 직면하였다. 중국은 혁명적 또는 사회주의적 인간을, 일본은 평화, 자유, 번영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을, 그리고 한국은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애국시민을, 새로운 시대의 인간상으로 삼았다. 비록 일본이 개인주의적 인간관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모든 국가가 단일 정체성을 가진 국민으로의 강력한 통합을 지향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국민성 개조’를 통하여 형성된 국민은 혁명, 재건, 근대화라는 국가가 설정한 목표에 동원되었다.

한편, 대다수 동남아 국가의 국민형성과 국가건설 과정은 동북아와 큰 차이를 드러낸다. 다른 나라에 비해 민족구성이 동질적이거나 근대 국가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빨랐던 베트남이나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들은 20세기 후반에 탄생한 신생국들이었고, 그 민족과 국민은 반식민투쟁 과정에 그 맹아가 싹 터 독립 이후에 비로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새로운 민족으로 편입된 종족들은 식민통치 이전에는 각각 독자적인 정체성과 정치체계를 유지했었던 분절적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민족은 모두 식민통치 후기부터 20세기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정통성을 지닌 허구”(legitimate fictions)였다(Anderson 1983).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역사가 40년밖에 되지 않는 싱가포르의 민족형성 과정일 것이다. 앤더슨의 말을 빌면 민

족은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로서 같은 정치공동체에 속한다는 생각을 공유할 뿐이다. 따라서 이질적인 종족들을 하나의 민족 내지는 국민으로 묶어내는 통합은 신생 동남아국가들에게 최대 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고, 그 과정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이들 국가는 국민 정체성 형성과 통합을 위해 “관주도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에 의존하였다(Anderson 1991).

반세기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 “국민”은 성장과 안정이 지속되던 시기에는 그런대로 통합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많은 경제적 모순, 사회적 탈구, 정치적 부작용을 낳았고,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사회계층을 출현케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때까지 추구되던 정체성 확립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민통합에 저항하는 반대세력을 등장시켰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은 경제발전의 결과로 생겨난 신중간계층이 민주적인 정치참여를 시도하고, 중국은 자영업자, 도시중산층, 노동자, 농민공 등 자율적인 집단이 출현하여 시민사회의 태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역주민 운동을 포함한 신사회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일본인들의 집단주의적 일체감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이질적인 문화를 표준화, 일체화하는 국민통합 방식에 반대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종족, 종교, 언어, 지역 집단들의 강력한 저항과 분리주의에 당면하게 된다. 이들의 저항과 분리주의는 처음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경제 성장이 위기로 변하고 체제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필리핀의 남부의 민다나오(Mindanao), 인도네시아의 아체(Aceh)와 서파푸아(West Papua), 미얀마의 까렌(Karen)족, 베트남의 고산족 등은 분리주의를 지향하는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으로 남아 있다. 중국의 신장(新疆)의 모슬렘들과 시장(西藏)의 티베트족도 줄기차게 중화민족으로의 통합에 저항하고 있다.

2. '통합담론' 과 비판이론

동아시아의 국민통합의 담론은 제3세계를 통해 보편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민족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 중국과 일본의 민족주의 운동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위협에 당면하여 대중적 자각과 국가의 동원이 결합함으로써 나타났다. 동남아에서는 식민통치 말기에 출현하여 독립 직후에 가장 강하게 표출되었다. 운동의 표적이 주로 서방국가이었기 때문에 동남아의 민족주의는 종종 반자본주의, 친공산주의 경향을 띠기도 하였다. 베트남이나 라오스는 공산주의를 공식적인 통치이념을 수용하였고, 인도네시아나 버마 같은 나라는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하고자 하였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공산주의 운동은 한때 큰 힘을 발휘하였지만, 베트남전이 끝나면서 공산주의는 인도차이나를 제외한 동남아 전역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탈식민국가에 있어서 국민통합은 지상명령과 같은 과제였다. 여기서 다원주의나 가치상대주의는 다양성의 발현이 아니라 이질성의 도전으로 비춰졌다. 필리핀이 자랑하던 오랜 민주주의 전통—“과두제적”(oligarchic)이라는 형용사가 항상 따라다니기는 하지만—도 결국 독재자 마르코스(Marcos)가 ‘기만적으로’ 내세운 민족주의의 깃발 아래 무너지고, 인도네시아 민족으로 통합된 수백의 종족도 민족주의자들이 내세운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Satu Bahasa, Satu Bangsa, Satu Negara)라는 민족주의 구호와 권위주의적 통치를 모호하게 정당화한 판차실라(Pancasila)라고 부른 “국가철학”에게 그 자율성을 빼앗겨야 했다. 뒤늦게 국민형성의 대열에 뛰어 들었던 싱가포르의 지도자들은 건국 초기에는 “동양 속의 서방국가”를 만든다고 영어 교육에 전념하다가, 1980년대부터는 근면성, 충성심, 규율 등을 핵심으로 한 다분히 ‘유교적인’ “아시아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총인구의 20%가 넘는 말레이인, 타밀인, 유라시아인들을 문화적,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

성장시대의 동북아시아가 국민통합을 위해 모색한 정체성은 상당히 획일적인 것이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충성과 봉사, 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과 자긍심, 외부적 위협이나 경쟁 앞에서의 통일과 단결 등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를 강조하였다. 중국은 1949년 대륙통일과 공산혁명 이후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등 끊임없는 정치동원 캠페인을 벌였고, 한국은 군사쿠데타, 10월 유신 등 정권 찬탈의 명분을 경제성장,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정치적 안정과 국민통합의 달성에서 찾았다. 타이완에서 국민당의 장기집권도 유사한 담론구조 속에서 이룩될 수 있었다.

통합 담론을 뒷받침하는 사회, 문화이론도 줄지어 등장하였다. 이러한 통합지향적 이론들은 1950~60년대 서구 특히 미국 사회과학계를 지배했던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의 전제 위에 선 “정상이론”으로서 비서구국가의 분석에 앞장 섰다. 특히 일본에 대하여는 많은 분석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수가 일본사회나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들이었다. 일본의 기질의 극단적 양면성을 그린 베네딕트(Ruth Benedict)의 『국화와 칼』(*Chrysanthemum and Sword*)이나 일본의 경제적 성공을 “일본적” 조직과 경영으로 설명한 보겔(Ezra Vogel)의 『세계제일 일본』(*Japan as Number One*)이 대표적인 저작이며, 그 외에도 일본 사회와 일본 정치의 예외성, 우월성, 특수성을 보여주는 일본인의 가치규범, 심성, 인간관계, 정치문화 등 갖가지 요소들을 들먹였다. 이 많은 “이론”들은 일본의 민족적 자긍심이나 우월성을 부추기기도 남았다. 요컨대 이 시대의 담론은 일본인들은 다른 아시아 민족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질이나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민족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일본만큼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통합이나 민족주의 담론과 부합하는 분석들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등장하였다.

통합담론에 대한 반대는 반민족적인 행위나 반국가적인 범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 군국주의와 세계대전이라는 극단적인 인성 및 생명 파괴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자각과 자성의 소리

도 어느 정도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어진 냉전체제와 불안정한 동북아 질서는 국가간 불신, 대립, 경쟁을 더욱 부추겨 이 지역에 속한 국가들에게 획일적인 집단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오히려 강화시켰다. 일본에서조차도 전후 교육제, 정치권, 노동부문, 지식인집단 등에 좌파세력이 부상하여 이념대립을 격하게 벌이기도 했지만, 헤게모니를 장악한 우파보수세력에 굴복하거나 타협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다른 동아시아국가에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반민족적, 반국가적 행위자로 간주했던 까닭에, 온건한 개혁 이론은 설 땅을 잃고 급진적 사회혁명론과 분리주의가 이념적, 지역적, 문화적 소수집단 사이에 명맥을 유지하였다. 건설적인 비판이론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에 밀려온 민주화의 물결과 1990년대 밀어닥친 경제 불황과 위기 이후에 가서야 등장하였다. 비로소 정치적 반대, 이념적 상이성, 지역주의, 종교적 이질성, 소수민족의 정체성 등이 건강한 사회, 민주적인 정치, 경쟁력 있는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소이자 자원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3. 회고적 재평가

통합담론을 지지하고 추수하는 많은 사회, 문화 “이론”들도 앞서 비판한 성장이나 안정에 관한 이론들만큼이나 편향된 시각, 주관적 분석, 잘못된 가정에 입각하고 있었다. 돌이켜 보면,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의 “이론”들은 동아시아의 발전에 기여보다는 해악을 더 많이 끼쳤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동아시아에 대한 문화적 분석들은 대개 다원주의적 가치관이 나 다문화주의적 세계관을 결여하고 있다. 유럽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가치상대주의적 입장이 일반적이라면 동아시아 사회에 대한 분석은 비서구, 전근대, 전통사회라는 단순이분법적 사고에 입각해 있다. 동아

시아는 지배적인 문화가 소수의 하위문화를 배척하거나 억압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동아시아의 문화는 접변, 수용, 이해보다는 충돌, 배척, 멸시 때문에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통합된다고 보여진다.

둘째, 동아시아에 대한 사회, 문화이론은 동아시아에 대하여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태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한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뒤에 나타나는 급격한 정치변동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문화변동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동아시아에서는 경제와 정치는 급변하고 문화는 이상하게도 변화를 거부한다. 국민국가의 건설과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정치세력, 집단이나 계층을 창출해 낸다면, 새로운 하위문화도 아울러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지구화는 문화를 전세계로 확산하며 제3세계의 문화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동아시아 문화는 경제발전과 정치변동의 종속변인일 수 있지만,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존 연구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셋째,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경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 문화연구는 매우 지역적이거나 사소한 문제를 다룬다. 그것은 서구적 관심과 이해관계에서 동아시아의 문화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흥미롭게 보이는 문제를 파고 든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쟁점을 만들어 내고 담론을 형성해 내어 동아시아의 현실로부터 점차 괴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서구사회와의 차별성만 강조되고, '내부자적 견해'(insider's view)에 입각한 문화분석은 소홀하다. 어떤 때에는 동아시아는 신비적인 미지의 세계로 비춰지기도 한다.

넷째, 동아시아 문화나 사회 연구는 비교적 관점이 결여된 일국사례연구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일국적 사례연구는 문화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되고 문화특수성으로 사회, 경제적 발전까지 설명해 보려는 무지까지 범했다. 오로지 문화에 대한 동아시아나 지역간 비교만이 문화 분석을 자민족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문화에 대한 유형화를 가능하게 한다. 특수주의적 환원론은 비교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V. 결어: 동아시아 담론의 극복을 향하여

동아시아의 성장, 안정, 통합을 다룬 이론들을 위기, 혼란, 저항을 맞게 되는 성장시대 이후의 동아시아 사회에 비춰 보면 그 이론들의 한계와 오류가 명백하게 부각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성장은 모순을, 안정은 갈등을, 통합은 분열을 씨앗으로 키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주의, 서구중심주의, 일원주의, 민족주의는 동아시아 발전의 양면성을 보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근대성을 인류발전의 보편적 가치로 취급한 근대주의와 서구적 경험만을 일반화한 서구중심주의를 탈피하지 못한 성장 이론들은 인간성의 발현보다는 물질적 성장을 중시하고 다양한 발전경로보다는 단선론적 발전만을 목표로 설정하여, 모순과 갈등이 폭발하게 될 동아시아의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원주의적 가치와 다문화주의적 자율성을 부정하는 일방적인 통합지향의 민족주의는 세계화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 민족 정체성의 형성을 방해하였다. 동아시아 곳곳에서 아직도 국민국가의 강압적 통합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적, 지역적, 이념적 소수들의 저항이 편재한 것은 바로 이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1990년대 들어 겪고 있는 경제 불황과 정치 변동은 이것으로부터 과거 성장시대의 '희극'과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할 교훈을 얻어낸다면 결국에는 '위장된 축복'으로 판명이 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문정인. 2002. “한일 정치경제의 비교분석: 문제영역, 이론, 연구과제.” 문정인, 오코노기 마사오 편. 『시장·국가·국제체제』. 아연출판부.
- 오가타 야스시(緒形康). 2000[2003].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본 현대 중국.” 『중국의 창』. 창간호 (3월). 예담.
- 장달중 외 공저. 2003. 『일본은 회생하는가?: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 江澤民. 2002. 『全面建設小康社會，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 中國共產黨第16次全國代表大會 報告. 11月 13日.
- Anderson, Benedict R.O'G.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 ed. London: Verso.
- Balassa Bela. 1991. *Economic Policies in the Pacific Area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Becker, Jasper, 2001. *The Chinese*, Free Press.
- Cardoso, Fernando Henrique, and Enzo Faletto. 1979.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se, William. 2002. *Politics in Southeast Asia: Democracy or Less*. Surrey, Great Britain: Curzon Press.
- Chang, Gordon G. 2001.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Random House.
- Deyo, Frederic C. ed.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Diamond, Larry, and Marc F. Plattner, eds. 1998. *Democracy in East Asi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vans, Peter. 1979. *Dependent Development: The Alliance of Multinational, State, and Local Capital in Brazi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eith, Herbert. 1979. “Repressive-Developmentalist Regimes in Asia: Old Strengths, New Vulnerabilities.” Paper delivered at the New York Conference of the World Order Model Project.

- Frank, Andre Gunder. 1998.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ilpin, Robert. 2000. *The Challenge of Global Capitalism: The World Economy in the 21st Centu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irling, John L. S. 1981. *The Bureaucratic Polity in Modernizing Societies: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Prospects in the ASEAN Region*.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Haggard, Stephan. 2000.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Huntington, Samuel P.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Johnson, Chalmers A. 1983.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e Kuan Yew. 1994. "Culture is Destiny: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 *Foreign Affairs* (March-April).
- Linz, Juan. 2000.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Boulder and London: Lynne Rienner.
- Marx, Karl. 1963.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Myrdal, Gunnar. 1968.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Vol. 1.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 O'Donnell, Guillermo A. 1973.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Authoritarianism: Studies on South American Poli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empel, T. J. 1998. *Regime Shift: Comparative Dynamics of the Japanese Political Economy*.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The Soft Ties of Asian Regionalism." A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ilding East Asian Community: Visions and Strategies* organized by the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December 11.
- Porter Michael E., Hirotaka Takeuchi, and Mariko Sakakibara. 2000. *Can*

- Japan Compete?* New York, N.Y. : Basic Books.
- Rao, Bhanoji. 2001. *East Asian Economies: The Miracle, a Crisis and the Future*. Singapore: McGraw-Hill.
- Stiglitz, Joseph. 2002.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London: Allen Lane The Penguin Press.
- Vogel, Ezra F. 1979. *Japan as Number One: Lessons for Americ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The Four Little Dragons: The Spread of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ade, Robert.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llerstein, Immanuel. 1974. *The Modern World-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A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World Bank Country Brief*. September. Nicola Bullard, Walden Bellow, and Kamal Malhotra, *Taming the Tigers: The IMF and the Asian Crisis* (Bangkok: Focus on the Global South, 1998)에서 재인용.

Development and Change in East Asia : A Reappraisal

SHIN Yoon Hwan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deconstruct those studies, theories, and their tendencies prevalent in the age of economic growth, political stability, and sociocultural integration in East Asia. The reexamination of existing social scientific constructs on East Asian modernization has been called for by recent changes in the region's politics and society caused in large part by Japan's "long-term recession" and her neighbors' financial crisis. These development of the 1990s proved those studies and theories, overwhelmingly loud in praising East Asia's rapid growth and political stability, to be basically false or at least substantially deficient. At this juncture, not only existing perspectives, theories, and studies but also their contemporaneous critiques need to be seriously reviewed and, indeed, deconstructed.

This particular study shows that the clusters of old economic, political and sociocultural academic works and activities were heavily influenced or even guided by the discourses of that time that extolled and mystified East Asia's rapid growth, maximum stability, and uniform integration. The main text of this paper is devoted to

subjecting major theories and studies under such discourses to concrete criticisms in the light of the region's changing situations and new developments, that is, the financial crisis and its subsequent political realignment and social transformations. My discussion ends by concluding that, from its beginning, East Asia's economic growth conceived various contradictions and serious limitations, political stability was only achieved at the expense of significant oppositions and latent conflicts, and sociocultural integration failed to sincerely accommodate resistant minorities and distinct diversities in the new nation.

Key Words : Economic Growth, Political Change, Sociocultural Integration, East Asia.